

안희정 징역 3년6월 확정... “피해진술 신빙성 인정”

비서 4차례 성폭행 · 6차례 추행 혐의로 기소

‘진술 신빙성’ 인정 따라 1심 무죄→2심 · 대법 유죄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5차례 기습 추행하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1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선 김씨 등의 피해사실 진술에 대한 신빙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김씨 진술도 의문점이 많다”며 “검찰 공소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씨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피해자는 신분상 특징과 비서라는 관계로 인해 지시에 순종해야 했고, 안

전 지사는 이런 시정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김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선고됐다.

대법원은 성범죄 등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사건 발생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잊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는 기준 판례에 따라 2심 판단이 옳다고 밝혔다.

대법원 측은 “기존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사건을 검토한 결과 원심 판단에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업무상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상고심 선고 뒤 취재진이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안 전 지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쟁점이 많았던 이

번 사건에서 어떤 점이 제일 어려웠는지 등의 질문도 나왔으나 그는 답변 없이 자

리를 뗐다.

뉴스1

안희정 전 지사, 여권 잠룡서 ‘성폭행 수형자’ 급전직하



안희정성 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행 선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때 유력한 대선후보였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53)는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수형자 처지로 전락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

심을 확정했다.

1989년 정치권에 입문한 안 전 지사는 1994년 지방자치실무연구소의 사무국장을

맡으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이광재 전 경찰지사 함께 ‘최희정·우광재’로 불리며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자문도 불렸다.

16대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캠프 정무팀장을 지냈고 대선에서도 이겼지만, 집권 뒤 이어진 불법정치자금 수사로 감옥에 갔다. 이후 첨예정부에서 공직도 맡지 못했다.

이후 2008년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정계에 복귀한 안 전 지사는 2010년 지방선거에 충남지사로 출마해 당선됐고 재선까지 성공했다.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에서도 수차례 1위를 차지했다.

1989년 정치권 입문해 199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
대선 전후 유력 대권후보 부상…성범죄로 논란 중심

자는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일로 안 전 지사는 충남지사직에서 물러났고 민주당은 그를 출당·제명 조치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김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5차례 기습 추행하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1차례

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지사는 협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

장했고, 재판에선 김씨 등의 피해사실 진

술에 대한 신빙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김씨 진술도 의문점이 많다”며

“검찰 공소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씨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피해자는 신분상 특징과 비서라는 관계로 인해 지시에 순종해야 했고, 안 전 지사는 이런 시정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김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1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하며 안 전 지사 측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안 전 지사는 수형자 신분이 됐다.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